

이재명 민주당 '민생 드라이브'...대안정당 부각 나섰다

의원 워크숍...정기국회 전략 논의 추 "이번 정기국회 민생제일주의" 입법과제·예산안 심사방향 공유 내일 광주서 현장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를 걸며 대안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하는 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를 지시한 데 이어, 31일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으로 입을 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가 이날 가진 의원 워크숍의 주제도 역시 민생이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민생시그널169, 민생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유능한 대안 야당'의 일원으로서 169명 의원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취임 일정으로 '민생'을 앞세웠던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도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정당정책에 따라 의원 여러분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온 것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하므로 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도부 선거 이후 여러 의원을 모시고 말씀드리는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부족함이 많은 데도 당 대표 역할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

다"고 인사했다.

원내 지도부는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의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대외 협상 전략 등 국회 운영방안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끌어내고 그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민주당부터 낮은 자세로 본연의 의무인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국정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 공세를 피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 진정한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생제일주의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이 대표는 당 내부의 통합에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잇따라 당 소속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전대 후 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 중인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에서 광주와 전북의 투표율이 뒤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를 기록해 겨우 꼴찌를 면하는 등 이 대표에게는 당의 뒷받침 호남 민심을 끌어안는 것이 숙제였다.

대선 패배에 따른 상처 입은 호남 민심을 수습하고 끌어안는 것이 민생제일주의와 함께 이 대표의 초반 당 운영 로드맵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종부세 관심을" 이재명 "가급적 협력, 과한 욕심 말라"

민생 협치 공감·예산 놓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만나 '민생 협치'에 뜻을 함께했지만 주요 예산 등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어대명(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안다.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면서 "이 대표 말씀처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간 공통공약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양당의 노력이 가속해야 한다"며 "정책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

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어든 어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여야 간 공통공약 추진기구 등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하겠지만 필요한 조정은 자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의의 경쟁, 잘하는 경쟁의 정치를 하자"고 했다.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종부세 완화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주째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들여다 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저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당에 얘기는 했다"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보니 시민들의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원 삭감했다는 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며 "소상공인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다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를 불러서 서로 간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책임

10년만에 ISDS 판정

론스타 청구액 4.6% 배상 판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제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352원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추세라 규모가 더 늘어

날 수도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925억원이 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만을 인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중재 판정부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배상액을 0원으로 줄이는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 신임 사무총장에 5선 조정식 의원 임명

김성환 정책위의장 재선임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사진)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치 경험, 당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당무·정부·정책을 두루 거쳤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안정을 위한 사무총장이 돼야 하는데 적임자"라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만큼 전당

대회 경선을 치르면서 친명계와 비명계로 갈라진 당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조 사무총장이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조 사무총장은 경기 시흥을에서 내리 5선을 했으며, 사무총장(2014~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019~2020년) 등을 지냈다. 이번이 두번째 사무총장 역할이다.

이해관계에 뿌리를 둔 조 의원은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친이재명계로 거듭났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당시에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진두지



휘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재선임됐다.

박 대변인은 김 정책위의장 선임에 대해 "정책의 연속성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며 "정기국회가 다가왔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노원병)에 입성해 이해찬 당 대표 비서실장, 원내기획 수석 부대표 등을 맡았다. 이번 인사를 두고 당내 안정과 친정 체제 구축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의 경쟁력이 커집니다. 아이의 지식과 정서가 커집니다. 신문으로 우리는 날마다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나를 키운 신문 내 아이 키울 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